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의 희망!

이제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다.



이제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다.

Contents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희망이 아니다 | 5

1. 노동자정당은 있는데 노동자정치는 없다?!
2.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3. 민주노동당이 자행했던 노동자 배신행위들
4.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 참패와 자유주의세력과의 동반몰락
5. 참패 이후 두 탁류에 휘말려 가라앉은 민주노동당
6. 다시 한 번 몰락과 한계를 확인시켜준 18대 총선
7. 대안 없이 대안임을 자처하는 진보정당

왜 사회주의 정당인가 | 17

1.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은 철저히 짓밟힌다
2.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책임지는 세상을 향해
3. 노동자정부 수립을 수미일관하게 밀고나갈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4. 사회주의정당 건설이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을 제안한다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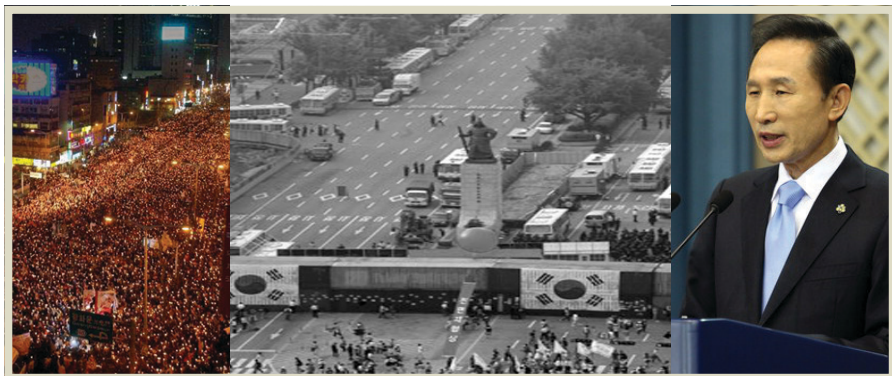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희망이 아니다

1. 노동자정당은 있는데 노동자정치는 없다?!

2008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사람들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민주개혁을 들먹이면서 규제철폐,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는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몰락하더니, 이명박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7,80년대 군사정권의 기세로 연일 반노동적, 반민중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생존권적 투쟁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폭거는 역대 정권 최저의 지지율에서 드러나듯이 벌써부터 2MB에 대한 광범한 환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명박에 맞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친소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솟아올라와, 그 열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노동적, 반민중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거리의 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진보정당들은 활기를 더욱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대한 대중적인 환멸이 있고, 대중의 직접행동이 조직되고 있는데, 이를 대변하거나 강력한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진보정치’는 없습니다. 자칭 진보정치는 대중의 진출을 쫓아가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역시 이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해가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으로 확대해가는 ‘노동자정치’도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라는 자칭 진보정당, 노동자정당이 존재하는데도 진보정치, 노동자정치는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정당의 무능에 대해서 대중은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2004년 이래로 계속 떨어졌고, 결국 2007년 대선에서는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참패에 대해 반성하고 쇄신하는 대신, 지리멸렬한



내부종파투쟁을 노정시키더니 이어서 분당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했고, 진보신당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2.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하겠다고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실패하고 맙니다. 지난 3월 3일 해방연대(준) 회원들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창당” 되었지만, 이처럼 “중대한 역사적 시도가 실패” 했다고 규정하고, 민주노동당 탈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탈당했던 단병호 전 의원도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가 당 위기 본질”임을 지적하며, 자신의 탈당은 “민주노동당은 위기의 본질을 통찰하

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내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있지만 민주노총 내에 민주노동당 당원은 없었다”는 단병호 전 의원의 말은 노동자당원들을 정치주체로 세워내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과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실패한 것은 비정규직 철폐, 질 좋은 일자리 등 오늘날 노동자대중이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과제의 해결이 심화된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극복과 지양을 우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안주적인 실천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노동현안의 해결에 무능력한 세력, 노동자정당이라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진정성 없는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자본, 정권과의 정면대결과 이를 위한 대중정치투쟁의 조직을 회피함으로써 자연히 노동자당원들이 투쟁 가운데서 정치주체로 성장하고 당의 의사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도 봉쇄되었습니다. 창당과정에 헌신적으로 결합했던 노동자당원들은 점차 주변화되고, 대신 상층관료가 당을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의 강화를 통해서만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주노동당이 자행했던 노동자 배신행위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에 경도되고 상층 당관료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며,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멀어져 왔습니다.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 방기, 2006년 노사관계로드맵 합의, 2007년 권영길 대선후보의 친기업당 발언, 그리고 한국노총 사과사태 등이 노동자계급을 배신했던 행태들 중 일부입니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130여개 사내 하청업체의 9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싸웠던 2005년 현대차 불파투쟁은, 비정규직 양산의 대표적인 수법인 위장도급의 문제와 근절을 사회적으로 호소하는 투쟁이자, 무엇보다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소중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정했고,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유리한 조건도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규직 노조가 연대투쟁을 방기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이 투쟁을 방기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위원장 출신 민주노동당 후보가 패배하는 것으로 지역 노동자들에게 심판받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쪽 현수막이 참담하게도 “비정규직 양산하는 민주노동당 심판하자”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12월 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로드맵에 대한 열우당의 수정 제안에 합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안은 물론이거니와 수정안 역시 반노동자적 성격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 반대 표결조차 하지 않고 합의해준 것은 배신행위였습니다.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되었으나, 중앙위원들의 압도적인 거부로 부결되고 맙니다.



배신행위는 2007년에도 계속됩니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였던 권영길 의원은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현충원을 방문하며 우경화 행보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방문해 민주노동당은 반기업당이 아니라며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발

언까지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들과 동지이면 열악한 노동환경, 이주노동자 착취의 온상인 중소기업현장의 노동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까? 노동자정당의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망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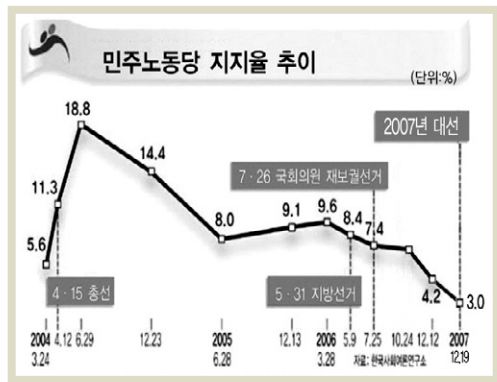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연이은 배신행위의 절정은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노총 사과 사태였습니다. 대선 정책연대 대상에 끼고 싶으면 자신들에게 했던 반노동자 집단이라는 비판을 사과하라는 한국노총의 협박에 민주노동당이 굴복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운동의 원칙조차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노동자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자기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노동자 배신행위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4.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 참패와 자유주의세력과의 동반몰락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실패하고, 노동자계급을 배신해오며 노동

자계급의 분노와 열망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왔습니다. 그 결과 계급투표에 철저하게 실패하며 대선에서 참패합니다.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3.0%를 득표했고, 이는 2002년 대선 때보다도 25만 표나 줄어든 득표수였습니다. 이러한 득표수의 감소는 민주노동당의 핵심지지층이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계급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자정치의 실천을 회피하면서 대신 전국의 유권자에게 다가선다는 명목으로 계속 우경화해왔습니다. 저들은 우향우를 통해 몰락하고 있는 노무현-열우당 자유주의세력을 자신들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의 대가는 자유주의세력과 동반몰락이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2006년 지자체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등 주요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생파탄을 야기한 자유주의세력을 심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세력 심판의 반사이익을 한나라당-이명박이 독차지합니다. 진보세력은 반사이익을 보기는커녕 반대로 자유주의세력과 함께 동반몰락해왔습니다. 이는 민심이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을 별개의 세력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무능력한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보는 보수/진보개혁 구도 속에 갇혀, 소위 진보개혁세력 내의 다소 급진적인 분파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은 착시가 아니라, 스스로를 차별화해내지 못한 진보세력의 무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년 동안 의회활동과 원외활동-대중투쟁을 창조적이고 급진적으로 결합하여 신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혁입법이라는 명분으로 열우당과 정책공조를 하거나, 열우당이 법안을 내놓으면 좀 더 왼쪽의 수정안을 내놓는 등의 보수정당과 별 다르지 않은 부르주아 헌법체제에 안주하는 의정활동만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열우당 2중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노무현-열우당과 나란히 추락한 것입니다.

5. 참패 이후 두 타류에 휘말려 가라앉은 민주노동당

노동자정치의 부재와 열우당 2중대 노선으로 자유주의세력과의 동반몰락에 이르고도, 민주노동당의 거대 정파들은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기 정파의 이익만 쫓는 행태를 노출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 민주노동당은 ‘두 타류’에 휘말려 가라앉고 맙니다. 자신을 혁신해낼 능력도 없다는 것을 온통 드러낸 채 해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을 가라앉힌 첫 번째 타류는 2004년 총선 이후 당권파로서 당의 몰락에 가장 책임이 있는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세칭 자주파는 대선참패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모습(가장 중요한 건 자기 노선에 대한 반성일 겁니다)을 보이지 않고는, 참패에 가장 책임있는 세력으로서 뻔뻔하게도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극심한 당내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의 운명과는 상관없이 자리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타류는 심상정, 노회찬이 대표하는 사민주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대선 참패로 형성된 당 혁신의 분위기를 자주파를 매도하는 데에만 이용했습니다. 당의 몰락에 대한 진정어린 평가와는 거리가 한참 먼 자주파 때리기의 반종북주의 공세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민족주의자들의 편향에 대해 사회주의자들도 비판해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측면에서 자기혁신을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선 참패 이후 마치 대선투쟁이 종북주의 때문에 실패했고, 당이 종북주의 때문에 망한 것처럼 주장했던 것은 철저히 신당을 염두에 둔 정치공세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종북주의를 둘러싼 극심한 종파투쟁은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평가를 가로막고, 정말 혁신돼야 할 문제들을 배제시켜 당의 몰락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6. 다시 한 번 몰락과 한계를 확인시켜준 18대 총선

대선참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종파투쟁으로 혁신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민주노동당 잔류파와 신당파가 각각 치룬 18대 총선은 당연히도 진보정당운동의 몰락과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0석에서 5석으로 반토막났고, 진보신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으며, 지난 몇 년과 동일한 오류를 다시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을 보면,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진보정당, 노동자정당이라는 정체성에 거의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진보정당운동에서 활동한 역사도 없을 뿐더러,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을 지지했던 사람(곽정숙), 2006년 지자체선거



때 강금실을 지지했던 사람(이정회), 아예 미래구상이라는 자유주의 단체를 주도했던 사람(지금중)이 후보였습니다. 이제는 당의 얼굴까지 자유주의세력 2중대화 된 것입니다.

한편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제안

을 하자, 다음날 “한평석 후보의 후보단일화 제안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까지 내며 반겼는데, 그 명분이 ‘한나라당 개헌선 확보 저지’, ‘한반도 대운하 저지’였습니다. 개헌선 및 대운하 저지는 바로 민주당의 선거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전 의원은 반한나라당 연대의 2중대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똑같은 자본가정치세력이라는 것은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과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공리입니다. 각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함께 밀어붙인 세력들을 저지세력과 연대세력으로 나누는 것은 진보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정치에 불과합니다. 결국 단일화에 실패하고, 민주당에게서 “선거에서 연대는 노선과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충고까지 들으며, 심상정 전 의원은 개인의 수모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의 수모를 샀습니다.

7. 대안 없이 대안임을 자처하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18대총선 활동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바로 경제

대안의 부재였습니다. 경제대안은 민생파탄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밀접한데, 양당 모두 한국경제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노동자, 민중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폭로가 없었고, 따라서 이명박의 ‘7%성장론’에 비견되는 국가적 경제대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파탄의 원인에 대한 폭로와 경제대안의 제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대중들은 민생파탄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세력의 무능함과 이념성이 야기한 것이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무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대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민생파탄을 야기한 똑같은 자본가정치세력이며, 민생파탄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는 점이 대중적으로 폭로돼야만 한나라당에 대한 왜곡된 지지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정치세력과는 명확하게 차별화된 경제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보세력은 스스로를 대안세력으로 높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본주의에 대한 폭로도 하지 않았고, 책임있는 경제대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공약집에서 “한국의 경제구조를 비롯한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전환적 대안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옹계 지적하면서도, 어이없게도 “민주노동당 혁신의 근본 방향 또한 사회에 대한 종합적 대안의 제시”라며 대안의 제시를 이후의 과제로 미루고 있고, “저항도 대안의 하나”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이보다 더한데 아예 총체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진보신당 정책공약집에는 그 흔한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연대전략 같은 정책들을 잔뜩 나열해 놓았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는커녕 신자유

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폭로조차 앓는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사회연대전략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협상파트너의 치부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일자리와 빈곤 문제를 말하면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노동시간변형제 폐지 등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조차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은 언어도단이었습니다.

이제 사이비 노동자정당이 아닌, 노동자 민중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와 맞장을 뜨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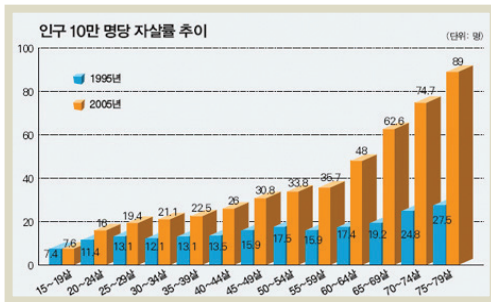




왜 사회주의 정당인가

1.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은 철저히 짓밟힌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소위 양극화라는 단어처럼 많이 들먹여진 단어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의해 평당 1억이 호가하는 아파트값과 30대 여성이 월 100만원 이상의 직장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고용불안에 의한 빈부격차 심화는 남한 자본주의를 증오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축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대빈곤층의 존재는 이 사회가 격차의 문제를 넘어서 상당수 민중에게는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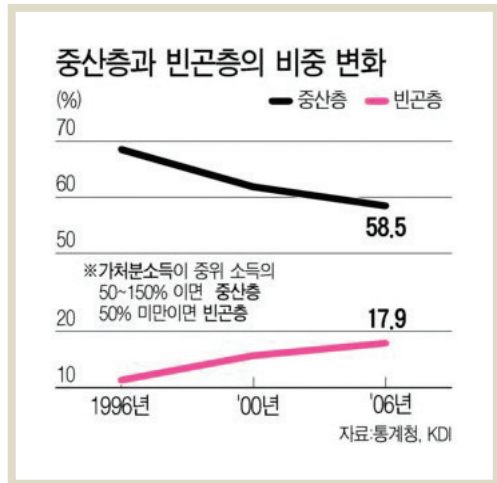


자살율과 이혼남녀의 빈곤화 경향, 중등교육 중도탈락인원, 기초생활수급자 규모 등은 우리사회의 빈곤과 연관되어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IMF 사태이후로 나날이 심화일로에 있습니다. 반면 부유층이 이용하는 명품가게는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수십억대의 아파트가 여전히 잘 팔리는 현상은 대다수의 빈곤이 일부 부유층의 방종과 과소비로 그리고 투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방종과 과소비를 위해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은 모욕적인 역할을 참고 지내야 합니다.

빈곤은 희망찬 미래를 위해 견뎌야 할 한때의 과정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저주받은 나락이 되었습니다. 빈곤층의 소외감을 위안할 유일한 소식은 그들의

동료들, 즉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98년도에 5%에 지나지 않던 절대빈곤층은 10년이 지난 지금 13%대까지 증가했습니다. 빈곤층의 증가는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규취업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8%에 불과한 현실은 중산층(중간층)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 반면 실업, 질병, 이혼, 개인파산 등 절대빈곤으로 떨어질 함정은 곳곳에 널려 있고, 떨어지는 자들을 구제할 사회적 그물(안전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한편 도시빈민들이 생업을 위해 나선 노점활동도 단속반과 여전히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가 하면, 농촌지역의 노령극빈층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맞물려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시달리는 비참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절대빈곤층의 증가는 멈출 줄 모르고 이들의 생활고는 점점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주의가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해결자체를 포기한 문제들입니다.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하여 실업자는 언제나 요구되고, 과잉설비, 과잉자본 때문에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본은 비정규직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이익과 존폐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책임지는 세상을 향해

실업과 빈곤의 증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짓밟고 있습니다. 역대 부르주아 정권은 고용과 빈곤의 문제를 시장적 방식, 그것도 가장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방식에 내맡김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 고무해 왔습니다. 이른바 시장의 실패는 일자리에 대한 민중의 체념, 즉 구직노력을 포기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실패가 입증된 시장적 방식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장은 사회에게, 야만은 문명에게, 무책임은 사회적 배려에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사적 소유방식을 유지하는 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빈곤의 문제를 책임질 사회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과 힘을 주어야 하며, 그것은 민중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행과 기간산업)을 사회적 소유로 바꾸는 것입니다.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는 최소한 '사회적' 소유방식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불안과 빈곤이 철폐된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는 소수 독점재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산업시설을 사회적 소유로 바꾸어야 하며 소수 특권층에 독점되어 있는 정치권력을 노동자 민중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부를 노동자 정부라 부릅니다.

노동자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회운영원리, 즉 사회주의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회주의 운영원리는 사회가 빈곤을 비롯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해결주체가 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고용과 의료, 주택, 교육, 보육, 심지어 집안일까지도 사회가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지상주

의자들이 싫어하는 단어들, 즉 계획, 정부개입, 보조금, 지원금, 증세, 국유화, 사회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등등의 조치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시장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화된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 국가기관에 대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개입, 공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선출제도의 도입과 소환제의 확대 없이는 사회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이에 따르는 민중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에 주어진 막강한 힘을 일부 소수의 관료나 특권층이 독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3. 노동자정부 수립을 수미일관되게 밀고나갈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사회주의 정당은 이러한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정부가 될 노동자 정부는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정당은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과 의지를 높이는데 힘을 쏟습니다. 사회주의정당은 허세를 부리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개혁세력이건, 민주세력이건 그 이름이 어찌되었던 간에 자본가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 보수정당에 의존하거나, 공조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으로 하여금 지금의 절박한 요구투쟁이 권력쟁취로 발전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의식과 의지를 높이는데 자신의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주의정당이 이 시기 노동자정부 수립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이후 지금까지 결정적 승리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면서 노동자계급의 전망과 시야가 협소해지고 자본주의체제를 벗어나려는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의지가 극히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역량의 존재여부를 말하기 이전에 그럴 의지와 기백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권력 수립이 현장과 거리에서 구호조차 나오지 않은 현상은 무기력해진 노동운동의 한 징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지와 기백의 복구 없이는 앞으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노동자의 역량은 결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운동 내에서 아직도 민주대연합이라는 낡은 사고에 매달리고, 정책공조라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본가 정치세력에 대한 의존을 당연시하는 개량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IMF사태이후 자본가들은 오로지 노동자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노사협조주의가 정리되기는커녕 날로 강화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정부주장은 자본에 한풀 꺾인 노동운동의 침체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주의 정당은 바로 그 실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고통만을 안겨주는 자본주의사회를 타도하고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고 사회를 운영해갈 수 있다는 의식과 의지를 갖게 하는 데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투쟁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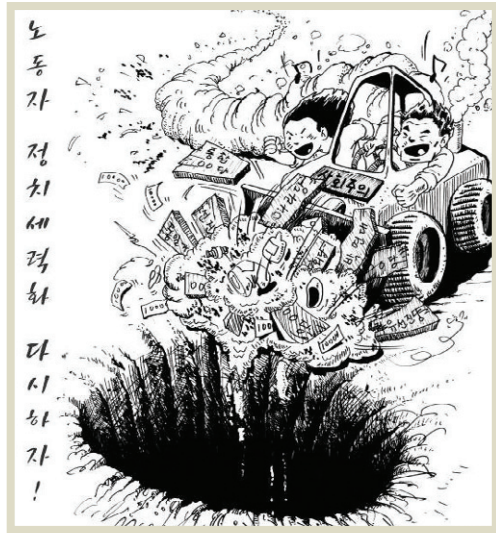
이러한 노동자정부 건설을 자신의 목표, 즉 강령의 최우선으로 놓고 활동하는 것이 사회주의정당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이라고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이건 진보신당이건 자본주의와의 어설픈 화해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노동자정부 수립, 노동자국가 건설을 목표로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정당이 없이, 남한 노동자 계급은 단 한발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4. 사회주의정당 건설이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 이후 사회주의적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궤도에 올랐다면 민주노동당은 지금 사회주의정당에 근접한 정당으로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의 역량부족과 기회주의자들의 시대착오적인 정치투쟁기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발전해야 할 때 발전하지 못하는 모든 존재가 정반대로 퇴보하듯이, 민주노동당은 발전해야 할 때 발전하지 못함으

로써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찾지 못하고 퇴보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온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후 종파적 이해를 앞세워 민주노동당에서 분당해간 진보정당도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전망을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서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퇴보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정당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민중이 자신의 권력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이 사회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 또한 오직 이 길 뿐입니다.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을 제안한다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을 제안한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정치적 몰락은 이들이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자본주의적 모순을 심화시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낸 결과,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고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증오는 진보세력의 무능으로 현 자본주의질서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한나라당, 이명박에 대한 맹목적 환상과 지지로 왜곡되어 표출되었다.

그 환상이 지금 급속하게 깨지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한나라당, 이명박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환상을 깨고 있다. 열린우리당=노무현에 이은 한나라당=이명박의 급속한 정치적 몰락의 근본원인은 한국자본주의가 결코 노동자, 민중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모순은 날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어떤 자본가정치세력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를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정당의 건설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민족주의자들과 시민주의자들이 격동하는 현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현 시기의 본질을 그 기회주의성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잠재적으로 노동대중과 가장 밀접히 결합하여 같이 호흡하며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이다. 그러나 이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의 실현이 요구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세력 역시 오랜 기간 계속된 노동운동의 정체와 후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결과 그 내부에 경험주의, 조합주의, 관료주의와의 불철저한 단절 등 많은 한계와 오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실제로 노동대중과 밀접히 결합하여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

을 철저히 혁신하여 이 한계와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회주의 정당 건설과정이 사회주의세력 자신의 혁신과정이기도 해야 하는 이유이다.

해방연대(준)은 당건설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의 혁신 운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결의를 사회주의자동지들에게 밝히며 사회주의자들 모두가 일대 자기혁신운동을 벌여 갈 것을 촉구한다.

해방연대(준)은 6월 7일 임시총회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계획」을 토의 결정하였다. 「건설계획」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현재의 사회주의세력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할 때 조직통합방식이나 당 건설일정을 중심으로 당건설계획을 잡는 것은 실천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당건설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건설계획」은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된 과제를 설정하였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문건 참조).

우리 해방연대(준)은 이러한 결정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책임성있게 나설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결정된 과제 대부분이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주의자들 모두가 같이 실천해야 할 과제, 또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천될 수 있는 과제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조직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제를 같이 실천해갈 것을 제안한다.

1. 강령초안논의를 시작하자!

당강령초안논의는 사회주의정당건설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

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강령초안논의는 지금까지 축적된 사회주의자들의 이론적, 사상적 성과를 강령의 형식으로 정식화함으로써 이들 성과를 축약하여 표현하고 논의과정에서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견해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어 이를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으로 극복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령초안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물을 내는 것 못지않게 강령초안논의과정이 사회주의자들과 변혁적인 활동가들 사이의 활발한 소통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령초안논의는 최대한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강령초안논의를 진행하는 방식들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현재의 조건상 실천적인 공동이론지를 통한 방식이 가장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안한다. 당건설이 당장의 일정에 오를 수 없는 조건에서 별도의 위원회나 팀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이런 방식이 풍부한 토론을 조직하는 데에서 오히려 제약과 부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령초안논의를 중심으로 하되 공동이론지가 당건설과 관련한 여타 중요한 이론적인 문제를 압축적으로 정리해가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공동이론지 외에 다양한 공론의 장을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마련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전선을 실제로 만들어 가자!

사회주의자들이 현재 돌파해내야 할 핵심적 실천 지점 중 하나는 사안별 공투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자들 특유의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민족주의자들, 개량주의자들의 기회주의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을 실제로 만들어 내어 노동대중과 직접 결합하여 투쟁하는 실천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현실화해내기 위해서는 역량상의 제약이 있더라도 당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진정성 있게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책임져가는 자세가 요구된다(진정성, 지속성, 책임성).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주의조직들이 조직적 결의를 통해 역량을 의식적으로 배치하여 사안별 공투체의 성격을 넘어서는 공동의 사회주의정치실천단(예를 들면 ‘사회주의행동’)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대중적 운동이 고양되어가는 기운이 꿈틀거리는 현시점에서 이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현안으로 떠오른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를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토론과 공동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

사회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활동가들과 함께 실천하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이들과 같이 해온 실천의 실제내용은 사회주의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갖고 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활동가들이 새로이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때에만 사회주의정당의 건설이 실제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변혁적 활동가 다수가 조합주의적 활동에 머문 것은 주된 활동영역이 조합활동인 관계로 조합활동의 관성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강하지만 사회주의활

동을 경험하고 참여할 기회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자들은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강령초안 논의과정에서도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학습지원을 위해 노동자정치학교를 공동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파’의 질을 넘어서는 민주노조운동내의 사회주의분파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해방연대(준)은 이상의 과제를 제안하는 것과 함께, 당연히 앞으로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조직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활동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제안한 과제뿐만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실천할 과제들은 많을 것이다. 또한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할 지, 과제들을 어떻게 서로 밀접히 결합시킬지도 일의 진행과정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동활동을 해방연대(준)이 적극적으로 조직해갈 것을 약속하며, 또한 적극적인 공동활동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6월 7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의 희망!
이제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다.



퍼 낸 날 2008년 7월 3일

퍼 낸 곳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주 소 140-880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0 인영빌딩 3층

전 화 02)2275-1910

홈페이지 www.hbyd.org

e-mail hbyd@jinbo.net

인 쇄 남이 (02-2269-2524)

